



[산업]  
기아자동차  
“중형 세단 기준 바뀐다”  
더 넓고 길어진 K5  
06

[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창립 8년만에 흑자  
매출 1조 달성  
L2



중랑  
서남

난지  
탄천

## 하수처리장 4곳, 신재생 에너지 거점으로

### 서울시 물재생센터 비전 3.0계획

물산업 분야 진출 기업 원스톱 지원  
하수처리 기능 고도화, 생태계 회복  
기피시설 아닌 친환경 시설 재창조

서울시가 중랑·난지·서남·탄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물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입주부터 연구개발, 기술검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시는 하수 처리 기능을 고도화해 녹조, 물고기 폐사, 미세플라스틱 등 우려를 낳고 있는 한강 수생태계를 회복, 기피시설로 인식돼온 물재생센터를 친환경 시설로 재창조한다.

서울시는 12일 ‘물재생센터 비전 3.0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은 그동안 저이용된 물재생센터 부지에 물산업 육성과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집적단지를 만들고 하수 처리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산업,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에너지 생산 같은 미래 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진기지로 만든다.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기술검증 등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5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수소 기술과 융합해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을 물재생센터에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은 센터 내 소화조와 건조 시설에 공급 한다. 시는 연내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수처리 기능도 강화된다. 시는 녹조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최신 수처리공법을 도입해 방류수 수질(BOD 7.0~5.9mg/L)을 한강(BOD 3.0mg/L)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처리 기능만 해왔던 센터를 물

질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기준과 시설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해 직영과 민간위탁 체계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오는 2021년까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탄천과 서남센터를 공단으로 통합한다. 시 직영인 중랑·난지센터는 직원 반발을 고려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비교 평가한 후 순차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물재생센터의 약취 관리를 위해 2021년까지 4개 센터에 나무 30만 그루를 심고 약취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물재생센터 비전 3.0 계획은 한강 수질 관리를 위해 물재생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며 “에너지 효율 혁신과 생산 확대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환상망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다. 시는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현대화와 연계해 약 1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산업이란 생활·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의 생산과 공급, 하수의 이송 및 처리와 관련된 산업을 뜻한다. 2025년 세계 물산업 시장은 102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물산업시장은 30조원 규모다.

시는 국내 1호 하수처리장인 청계 하수종말처리장(현 중랑물재생센터)을 시작으로 1987년까지 난지·가양(서남)·탄천 하수처리장을 차례로 준공해 하루 498만t의 오·폐수를 정화하고 있다.

시는 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처리 기능만 해왔던 센터를 물

## “고흥서 올라온 농·특산물 만나보세요”

### 서울시 노원구 15~17일 직거래장터

서울 노원구는 15~17일 중계근린공원에서 ‘고흥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전남 고흥군의 23개 업체가 35개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다. 영업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장터에서는 고흥군 특산물인 유자, 석류, 마늘, 건어물, 수산물 등 100개 품목을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서 만나볼 수 있다. 고흥군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가 출하되는 시기인 만큼 시식과 시음행사, 유자청 담그기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다가오는 김장절을 맞아 고흥군의 절임배추, 멀치액젓, 고춧가루도 현장에서 판매한다. 이외에 김치 담그기, 손두부 만들기 체험부스와 통장어탕 등 먹거리 장터도 준비됐다.

## 만 55세 이상 서울 거주자 ‘무료 취업 알선’

###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적성·능력에 맞는 구인처 발굴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관내 어르신들은 위한 취업 안내 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재취업 욕구는 높지만 다른 구직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러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관내 고령자 취업 알선 센터를 운

영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구인처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알선해준다. 노인층의 소득을 보장해 보람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도록 돋보기 위해서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 중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복지관을 방문해 등록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취업알선 및 연계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구직자와 이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구인업체다.

/김현정 기자

관련 종사자 수 1만명 증가

경기도 내 콘텐츠 산업의 2017년도 매출 규모가 1년 새 12.8%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1만여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낸 ‘2018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

과(2017년 기준)에 따르면 2017년 매출 규모는 23조6754억 원으로 2016년 20조 9852억 원 대비 12.8%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별로 출판 5조9757억 원, 게임 5조4659억 원,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4조3190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7조8907억 원,

파주 5조1681억 원, 남부 2조2156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종사자 수는 2017년 기준 12만6126명으로 전년 11만5975명보다 8.8% 증가했다. 산업별로 출판 4만2833명, 게임 2만 6331명,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1만 7484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성남 3만5178명, 파주 2만3730명, 서부 1만1994명 등 순이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제2의 잠원동 붕괴사고 막는다”

### 해체계획서 전문기술자 직접 설계 철거 심의 전 공사장 전문가 현장점검

서울시가 심의·허가부터 공사·감리 까지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공사 현장에 종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은 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고 철거 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의 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

시는 내년 5월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 서 허가제로 바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건축심의 때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 과정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한다.

/김현정 기자